

현장의 목소리

노동자해 사망은 회사가 저지른 살인이다



나. 그 슬픔과 비통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의 동지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발전현장에서 왜 이렇게 사람이 계속 죽어 나가야 할까요?

노동자의 죽음은 한 사람의 삶을 마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미망인과 13살 헤원이, 그리고 9살 성령이는 가장을 잃은 슬픔과 고통으로 정신적인 공황상태에 있습니다. 둘째 성령이는 '아파트의 이웃들과 학교에 아빠가 돌아갔다는 사실을 알리지 마라'고 합니다. 큰 애 헤원이는 '잘해드리고 싶었는데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고 돌아가신 아빠를 원망합니다. 미망인은 슬픔에 젖을 여유도 없이 두 아이를 추스르기도 버거워 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을 이렇게 파괴시켜 놓은 회사의 사장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전격적인 조치로 유가족에 대한 보상을 결정해서 작은 위안이 나와 주면서 이후의 생계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발전현장은 어느 공사장이나 공장 못지않게 대단히 위험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이 터질지 모르는 지뢰밭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전 시절, 전국의 발전현장에서 사람이 죽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분사 이후 왜 발전현장에서 계속 사람이 죽어 나가야 하는 걸까요?

저는 그 이유가 사람보다 이윤을 우선시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전 시절에 비해서 발전현장에 필요한 인력이 상당히 감소했습니다. 사고 이전에 인건비까지 지부는 제2발전소(북합)에 6명의 기술직 인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서 6명의 인원이 추가로 투입되지 않으면 노동재해에 대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지부의 주장에 사업소도

인정하고 본사에 인원충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었습니다. 그러나 본사는 선진화 방안이라는 구조조정을 이유로 정원을 21%나 정부에 반납하면서 사업소에 줄 정원은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남강우 동지의 사고는 최저가 입찰로 인한 부실기자재 도입이 주요한 원인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새로 지은 고압차단기실에 빗물이 새는 부실공사와, 예산절감을 위한 독립공간 미설치가 주요한 원인입니다. 미끄럼 방지용 바닥재는 의연되었고, 가격이 싼 에폭시가 사용되었습니다. 발전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격이 싼 에폭시바닥은 빗물이 흘러들거나 기름이 뿜으면 얼음판처럼 미끄러워 언제든 사고를 부를 수 있습니다. 두 동지의 또 다른 공통점은 더 많은 이윤을 내라는 탁달에 한시도 편할 날 없었고, 본연의 업무보다 더 많은 일에 시달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발전현장에서 사람이 다치거나 죽어나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전기 생산을 중단하는 한이 있어도 사람이 다치고 죽도록 내버려 두서는 안 됩니다.

인명사고가 나면 발전기를 정지하고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서 완벽하게 시행하고 나서야 발전기를 돌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평소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담보하면서 운전하거나 작업하도록 강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발전기를 정지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든 다음에 작업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도 훨씬 유리하다고 인식하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기자재를 사용하고 정상적으로 정비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재해가 발생했을 때, 다시는 동일한 재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재해의 근본원인을 찾아내고, 그것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재해의 근본원인을 찾아내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다루려고 합니다. 규정을 준수했다면서 재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에만 급급합니다. 기껏 대책이라는 것이 안전장구의 착용을 운운하면서 여러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 정도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노동재해가 재발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발전현장에서 근본적인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면 노동재해는 재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의 설비가 디자인과 공학적 시스템에 문제는 없는지, 정비와 감독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고를 완화시키는 시스템은 제대로 설치되고 작동하는지, 사고를 미리 알리는 경보시스템은 완비되었는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훈련과 절차에 대한 시스템을 시행하는지, 스트레스와 피로도 등 인간 공학적인 시스템은 반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을 회사가 하도록 노동조합은 강제해야 합니다. 노동조합 간부는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받아서 조합원에게 전파해야 합니다. 다른 요구와 마찬가지로 죽지 않고 일할 권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쟁취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회사의 살인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발전현장에서 사람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듭니다. 단결하고 투쟁해서 노동재해 없는 세상을 쟁취합니다.

故 오동은 동지여! 편히 쉬소서!
조진욱 (인건화력 지부위원장)

모두가 사랑하던 오동은 동지가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항상 미소 지으며 매사에 열정적이었고, 특히 노동조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동지가 먼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안타까움과 아쉬움과 미안함과 분노가 치밀 뿐입니다. 차마 보내고 싶지 않은 동지를 떠나 보내며 많은 이들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에게 동지를 보낸 빈 자리는 너무도 크게 남아 있습니다.

작년 1월초에도 우리는 한사람의 동지를 떠나보냈습

혈세낭비, 환경파괴, 국민고통 4대강 죽이기 사업

공공기관 노동자도 죽입니다!

♣ 쟁대위신문 6호 낱말맞추기 정답 ♣

연	봉	제			나	이	테		
		우					이	글	루
		스	리	랑	카	저			
			무		이	로			원
동	귀	어	진						경
		용							감
		노	점	상					사
산	조		하			수	원	수	구
별			이						루
노			중	차	대				피
조	변	석	개			지	명	파	업

[당첨자] 보령화력 이규승 보령화력 오종민 보령화력 김태운 영남화력 장남호 (이번호 낱말맞추기는 지면관개로 합니다)

30조원 = **10조 4천억원** + **??조원**
4대강 사업예산 1~6차 공공기관 선진화방안 절감 예산액 공공기관 추가 구조조정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했던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은 13조9000억원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이보다 60% 이상 늘어난 본 사업비와 직접연계사업비를 포함해 22조9000억원으로 증액되었고 연계사업비 고려시 실제로는 투입 금액이 최대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285조원인 것을 생각하면 엄청난 돈입니다.

정부는 이미 '4대강 사업 예산은 정부 재정 여건을 감안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이 재정을 분담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촉진 방안'(7월 2일, 관계부처 합동)에서는 공공기관의 4대강 사업 참여를 'SOC, 에너지 및 관광·농업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09년 공기업 투자계획을 확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금년 중 집행가능하고 타당성이 검증된 4대강 정비, 자원개발, SOC 등 성장잠재력 확충 및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에 돈을 쏟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4대강 사업 예산을 짜내기 위해서 공공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정부의 4대강 사업 홍보를 위한 공공기관 임직원 강제교육은 독재정권식 여론 조작 정책입니다.

서민도 죽이는 4대강 사업
지난 6월 29일 정부가 발표한 약3조원 서민경제 대책 예산은 4대강 죽이기 사업의 10%에 못 미치는 예산입니다. 30조원 이상을 강바닥에 쏟아 부으면서, 정작 국민들에게는 2조원

대 예산으로 재정정책을 풀어놓고 따뜻한 서민경제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생명을 죽이는 4대강 단순 토목사업에 막대한 국민혈세를 낭비할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민생예산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환경도 죽이는 4대강 사업
정부는 강바닥을 끌어내면 수질이 개선된다, 물이 많이 흐르므로 수질이 좋아진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보(댐)를 만들면 물이 정체되어서 오히려 수질이 악화됩니다. 강바닥을 끌어내면 생태계가 파괴되고 수질 정화 효과가 사라집니다. 이후 4대강 정비사업이 운하사업으로 변질되면, 선박 운항으로 인한 폐유 유출 등 심각한 수질오염까지 우려됩니다.

쟁의대책위원회

2009년 9월 7일 제7호

발행인 박노균 주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99-6 대동 B/D 5층 TEL 3456-8156 FAX 3456-8159 http://baaljeon.nodong.net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KOREA POWER PLANT INDUSTRY UNION

9월 11일 조합원 야간 총회

9월 17~18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우리 함께가자!

너희는 조금씩 굶아먹지만, 우리는 한꺼번에 되찾으리라!

2009년 달력의 2/3가 뜯겨 나갔다. 돌이켜보면 사측이나 노동조합이나 참으로 집요했던 시간이었다. 발전회사 경영진은 MB정권의 압력에 무차별적으로 구조조정 계획을 쏟아내고, 실행에 혈안이었다. 이에 맞서 발전노동자는 구조조정 분쇄, 정원감축·신입사원 임금 삭감 이사회 저지, 부족인원 충원을 위해 힘겹지만 결코 굴복하지 않고 투쟁했다. 그리고 여전히 싸움은 진행중이다. 이제 승리를 위해 집중해야 할 때다.

권역별 조합원 야간총회(9/11)와 쟁의행위 찬반투표(9/17~9/18)를 앞두고, 위수사와 5개 본부장이 또 다시 현상준수를 통해 전조합원 총투표를 호소하고 있다. 야간총회와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09년 투쟁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더 큰 투쟁을 만들어내기 위해 가열한 야간총회와 압도적인 쟁의행위 결의로 스스로의 의지를 모으고, 동지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어야 한다.

노동자는 쪽수로 말한다. 노동자의 힘은 단결에서 나온다. 동지를 믿고, 나를 믿고, 함께 싸울 때만이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 7천 조합원이 하나되는 강고한 투쟁으로, 선진화·구조조정 분쇄하고 부족인원 충원하자. "너희는 조금씩 굶아먹지만, 우리는 한꺼번에 되찾으리라(단결투쟁가)"를 소리높여 부르며, 제대로 한 판 붙어보자. 동지를 위해! 나를 위해!

구조조정 분쇄! 성과경쟁 분쇄! 인력충원 쟁취!

위수사와 5개 본부장 현장순회

7천 조합원이 함께 하는 투쟁 위해



9월 11일 권역별 야간총회와 9월 17일 - 18일 정의행위 찬반투표를 앞두고 중앙재대위가 두 개조로 나누어 현장 사무실을 돌며 조합원 동지들의 단결과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5개 본부장

조합원 동지들, 현장에서 선진화, 구조조정 얘기 많이 했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타났던 선진화 구조조정 방식들이 계획과 준비단계에 있었다고 한다면, 정부가 말하는 2기 선진화 방안은 이런 것들을 올해 안에 완결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임금저하형의 연봉제와 임금피크제 등을 도입하라는 것이 2기 선진화라고 노동조합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의 생각과 분노를 행동과 실천으로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발전노조 하반기 투쟁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우리의 단결을 바탕으로 향후 투쟁의 수위를 점차 올려 가려고 합니다. 9월 11일에 있을 발전노조 권역별 야간총회를 필두로 해서 발전노조 하반기투쟁의 포문을 열려고 합니다. 권역별 발전노조 야간총회 전 조합원들이 꼭 참여하셔서 하반기 투쟁의 힘을 모으는 큰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9월 17-18일 발전노동자 생존권 사수를 위해 정의행위 찬반투표가 있습니다. 이런 힘을 바탕으로 2009년 생존권 사수를 위한 우리의 투쟁들이 반드시 승리로 갈 수 있도록 다같이 참여해주시고 단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중앙재대위가 앞장서서 당당하게 투쟁해 가겠습니다.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노동조합은 하반기 투쟁을 결의했고 하나하나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공공부분 선진화란 이름으로 1,570명 감축당하고 대졸초임 삭감에 이어서 기존직원들 100%

임금 삭감 당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연봉제, 임금피크제까지 도입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발전회사별 정발 다양한 형태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얻어맞고 당할 수 없기에 하반기 투쟁을 결정했습니다. 2009년 하반기 투쟁은 조금 더디더라도 7천 조합원들과 같이 가는 투쟁으로 만들어 가자 합니다. 정말 계획만 있고 조합원들 없는 투쟁은 하지 않겠습니다. 때로는 조합간부들이 먼저 나서고 투쟁하지만, 때로는 현장 7천 조합원들 함께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동지들, 9월 11일 권역별 야간 총회에 해당 발전소로 지부장 지침에 따라서 한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호소 드립니다. 권역별 야간 총회는 발전노조 하반기 투쟁의 시발점이자 첫 단추입니다. 제대로 해봅시다.

공공부분 노동자들, 현재까지 많은 공격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무력합니다. 이렇게 무력하게 대응하다가는 내년에는 또 어떤 공격에 노출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투쟁을 시작했으면 합니다. 동지들 끝까지 함께합시다. 동지여러분 고맙습니다.

당당한 요구, 투쟁의 이유

하반기 투쟁을 위한 조합원의 힘이 점점 더 크게 모아지고 있다. 8월 26일 제34차 중앙위원회에 참석한 중앙위원들은 권역별 조합원 야간 총회(9/11)와 정의행위 찬반투표(9/17-18)를 합차게 진행시키기 위해 더욱 가열차게 현장을 조직할 것을 결의했다. 그리고 지금 전국의 모든 현장에서는 중앙재대위원들이 직접 조합원들을 찾아다니다며 이여 때보다 절절하게 '함께하는 투쟁'을 호소하고 있다. 발전노동자의 요구는 당당하며, 투쟁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자.

부족인원 신규충원!

발전 5개사는 현재 600여명의 부족인원이 있다. 이 부족인원도 정원에 대한 부족인원이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따진다면 부족인원은 더욱 늘어나고 있다. ② 정부와 회사는 정원을 줄여서 부족인원을 없애버리는 방법으로 현장의 인원을 점점 줄여가고 있다. ③ 또한 해외사업 등 신규사업에 대한 필요한 정원을 주지 않고 있다. 동서발전의 예측진단처럼 기존의 직원들을 빼서 신규사업에 배치하기도 한다. 결국 현장의 부족인력과 신규사업의 인원 미충원은 발전현장의 노동강도 강화와 구조조정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한다면서 청년인턴제나 공공근로처럼 생색날 날 것이 아니라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말년의 청년실업 해소가 되어서는 안된다. 발전현장을 비롯한 공공부분의 부족인원을 충원함으로써 실업을 실질적으로 줄여야 한다.

공공기관 선진화 저지!

이명박 정권은 공공기관 선진화를 통해 인력감축과 임금삭감 그리고 단체협약 개악 등 노동조합에 대한 다방면의 공격을 하고 있다. 발전회사도 정부의 선진화 정책에 맞춰 지난 8월 이사회를 통해 1,570명의 정원을 줄였다. 또한 신입사원 임금 삭감과 경영평가를 통한 성과급 20% 삭감을 통해 실질임금을 삭감했다. 또한 감사원 감사를 통해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과 현장의 활동을 위축시키려 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이제 제2기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통해 ① 호봉제를 연봉제로 바꾸고, ② 직급과 괴를 통한 성과경쟁을 강화하고, ③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단체협약과 노동조건을 개악하려 하고 있다. 결국 공기업에 대한 시장화를 통해 공공성을 희생시키고, 경쟁과 평가를 통해 수익성만을 우선시 하는 '무늬만 공공기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성과경쟁 체계, 구조조정 프로그램 분쇄!

공공부분 선진화의 핵심은 성과경쟁을 통한 퇴출, 그리고 보직축소 부서 병합 등을 통한 인원 축소와 구조조정이다. 현장 인원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성과논리에 따라 일은 많아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동료끼리 경쟁시키고, 개별 평가를 통해 무보직을 거쳐, 결국 퇴출로 더 많은 사람을 자르고 후사처리가 없다는 것이 현재 진행되는 구조조정 방식이다. 남들의 சொ지쟁, 동서의 사업소장 책임경영제, 다면평가, 개인평가를 통한 인사·성과급 연계 및 무보직, ERP·BSC·TDR 등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그물처럼 얽혀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 이 그물을 찢어버리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노동강도 강화와 개별평가를 통한 임금삭감, 동료를 적으로 여기는 경쟁만이 남을 뿐이다.

구조개편 10년, 잃어버린 10년

5개 발전회사로 분할된 후 해가 갈수록 현장에서 조합원들을 만나기 힘들어지고 있다. 해마다 설비와 신규 사업은 늘어나지만, 인원충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결국 현장에 사람이 없다. 인원은 없이 시운전이 진행되고, 안전조치 등 정상적 절차를 통한 설비 점검·정비조차 힘든 상황이 모든 발전현장에 만연하게 됐다. 노동강도가 강화되고, 인원충원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위의 그림 ①과 ②는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설비용량이 42.8%(발전량은 50.5%) 증가하였으나, 인원증가는 19.4%에 그쳤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수치의 차이는 고스란히 우리 발전노동자의 노동강도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10년의 성과는 무엇인가?

발전부문이 분할되고 채 2년이 지나지도 않은 2002~2003년, 경제체제 하의 경영성과에 대한 보고서 2건(산업자원부, △△회계법인) 제출되었다. 수익성이 향상되었다는 보고서의 결과는 민영화 찬성론자들에게 의해 분할과 경쟁의 성과로 선전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 2003년까지 영업이익이익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분사 이전의 영업이익 증가(2002년 35%)에 크게 못 미친다. 2002년의 영업이익률 증가는 발전연료비, 감가상각비, 이자비용의 감소에 따른 일시적인 결과일 뿐이다. 국제 에너지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 ② 및 ③ 참조

블둥은 노동자와 설비로...

이렇듯 수익성 등 경영성과 부분의 빈약함을 만회하고자 하는 단기 성과주의는 부속인원 운영, 수선유지비 삭감, 설비투자 축소 등의 형태로 나타났다. 계획에랑 정비공사 공기가 단축되고, 시행주기가 길어졌다. 누후 설비를 정비·교체해야 하는데 예산이 터무니없이 줄어들 수가 없다. 수선유지비를 줄이기 위한 회사의 이러한 행태는 노동강도를 강화하고, 질소적인 정비로 정비 품질을 저하시키고 있다. 적기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해 설비의 안정적 운전에서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며, 설비·

인명사고를 야기할 것이라고 발전노동자들은 소리 높여 주장했다. 그러나 원가절감에 목맨 회사는 노동자들의 주장을 외면했고, 제 때 정비되지 못한 설비들이 불시정지되는 사고로 현실화 되어 더 큰 손해를 끼치고 있다. 지금도 잠재적 위험 속에 설비들이 운전되고 있다.

오류는 정정되어야 한다

분할 이전에는 고장·사고 사례를 전파와 정비·설비개선 우수사례 교환을 통해 발전산업 종사자들은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분할 이후 발전 5개사간 경쟁을 말하는 지금은 이런 일들이 가능하지 않은 일이 되어버렸다. 발전소간 자체 공수도 원활치 않다. 이런 사소한(?) 문제와 더불어 연료구매와 전력거래시장 구축 등으로 인한 비용 지출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이는 너무도 명백히 밝혀진 사실이라 이 글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전력산업구조개편의 실패로 인한 엄청난 좌초비용이 예상됨에도 Go를 외칠 것이냐, 정신을 차릴 것이냐의 기로에 서 있다.

발전분할과 민영화 10년은 문제점과 비효율만을 축적해 온 10년이였다. 또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됐던 미봉책들이 실패를 거듭했던 10년이였다. 현재와 같은 과도적 체제에서 발생하는 전력산업 문제의 근본적 원

② EBITDA 대 총자산 비율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남동	15.64	21.10	19.42	13.14	16.84	12.02	9.78	6.14
중부	14.64	23.39	26.32	15.87	14.37	12.38	13.28	3.44
서부	13.70	22.22	23.40	17.13	15.43	12.51	15.83	6.48
남부	10.13	17.49	18.16	16.49	15.57	17.04	16.58	3.32
동서	9.51	15.54	15.87	12.76	10.63	10.94	11.36	8.85
합계	12.23	19.50	20.11	14.92	14.36	12.87	13.14	5.58

③ 유연탄 및 주요에너지 가격

구분	단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유연탄	US\$/톤	34.50	28.85	26.75	44.00	53.00	49.00	65.90	127.52
5사 구매단가	US\$/톤	34.36	29.52	31.63	50.28	57.31	54.19	62.96	91.98
우라늄	US\$/lb	8.84	9.88	11.56	18.65	28.82	49.90	99.30	61.70
석유	US\$/배럴	22.81	23.75	28.2	33.5	49.32	61.4	95.97	44.60

인은 분할·민영화 정책에 기인한다. 따라서 문제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서는 전력산업의 통합적 관리가 대안이다.

오히려 우리보다 앞서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을 진행했던 해외에서는 구조개편의 문제점에 대한 반성으로 재통합의 움직임과 함께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통합적인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력산업에 경쟁을 도입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를 주장하며 구조개편을 추진했다면, 이제는 구조개편 중단, 재통합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맞춰 실패한 분할, 민영화 정책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정책기획실

공공부문 선진화 분쇄,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

- 철도/발전/가스 포함 공공부분 9개노조(5만 5천여명) 기자회견 -



철도/발전/가스노조를 포함한 공공부분 9개 노조가 공공부분 선진화 분쇄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분부를 결성하고 10월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3일 민주노총 기자회견실에서 열린 출범기자회견에서 공동투쟁분부는 ① 공공부분 선진화/민영화 중단 ② 단결 개약 및 성과연봉제 도입 중단 ③ 공공부분 일자리 확대 및 부족인력 충원 ④ 노조탄압 분쇄 및 노동기본권 보장 ⑤ 4대강 정비사업 중단과 사회공공성 예산 확충 등 대정

부 5대 요구를 발표했다.

공동투쟁분부 소속 사업장들은 9월 중에 조정신청과 정의행위 찬반투표를 완료할 예정이며, 9월 26일 서울에서 2만명 이상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교섭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정부의 수익있는 압변과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단위 사업장별 정의행위 찬반 투표를 거쳐 10월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며, 9월 26일 최소 2만명 이상이 모이는 대규모 결의대회를 서울에서 열기로 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노준 위원장은 "3월부터 일방적인 정권감축, 신입사원 초임삭감, 성과급 삭감과 함께 발전5개사가 경쟁적으로 구조조정을 도입하고 있다. 궁극적인 목적은 성과평가와 노동자 쫓겨우기다. 현장의 부족인원이 심각하다.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 얘기하고

있는데 발전현장에 양질의 일자리 충분이 있다. 그런데도 정권조차 확보되지 않고 있으며 예전에 없던 재해사망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고, 양보할 부분도 없다. 독자적인 투쟁을 준비하면서 철도, 가스를 중심으로 하반기 공공부분 공동투쟁의 힘을 배가시켜 나가겠다"는 결의를 밝혔다.